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늘리는 투쟁이다

자회사 전환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공공 비정규직 파업과 쟁점

3면, 6~7면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3면

진보세력이 난민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

8~9면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5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논쟁

11면

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남한보다 진보적?
퇴보적?

10면

공식 정치권의
계속되는 우경화

4면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정선영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으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압도 다수는 사립 유치원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들은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자금을 유용하고, 교구나 교재 납품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고, 식자재를 빼돌려 왔다. 심지어 유치원 운영비를 명품 핸드백, 호텔, 여행 경비로 쓴 경우도 있었다.

“도둑질은 그만”이라며 학부모 수백 명이 거리에 나선 이유다. 이들은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시·처벌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사립 유치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2조 원이 넘고, 이는 사립 유치원 지출 총액의 49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 원장들은 이를 제 돈처럼 써 온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됐다. 원장이 고액 월급과 많은 혜택을 챙길 동안 아이들에게는 질 낮은 밥·간식이 제공됐고,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 왔다. 원장의 설 상여금이 750만 원인데 반해, 교사는 겨우 5만 원인 곳도 있었다.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 때문에 사립



대학보다 더 가기 어렵다는 국공립 유치원

유치원의 교사 3명 중 1명은 1년을 못 버티고 일을 그만둔다.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유아 교육이 될 리 없다.

그런데도 사립 유치원의 70퍼센트를 포괄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해도 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립 유치원은 ‘교육 공무원’보다 훨씬 깨끗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썩기는 피장파장이라며 자신들의 부패를 덮으려는 술책일 것이

다. 물론 교육부 관료들의 부패는 오래된 일이다. 그 중 유치원장들과 교육부 관료들의 부패한 유착관계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2013년부터 교육청 감사가 있었지만 수년간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며 “유치원, 교육부의 부패 유착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정말이지 모든 부패 의혹이 성역 없이 밝혀져야 한다.

시장주의 정책의 결과

사립 유치원 비리는 이제껏 유아 교육을 시장에 의존해 온 정부 정책이 낳은 결과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들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미래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 노동력 활용을 늘리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국의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는 민간 시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정부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했지만 2000년대를 거치는 동안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거의 정체했다. 지난 몇 년간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국공립의 비율은 25.5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정부는 민간 유치원 설립 요건을 완화해 서비스 공급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서비

스 이용자에게 돈을 지원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이런 방식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긴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국공립 유치원 설립)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이처럼 유아 교육·보육을 민간 업체에게 의존하다 보니, 유치원 운영이 이윤 추구에 종속됐다. 질 낮은 교육 환경, 노동조건, 원장들의 비리 문제는 그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임기 내에 40퍼센트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실행은 매우 미흡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의 비중 증가는 0.6퍼센트포인트에 그쳐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게다가 예산 부족과 사립 유치원의 반발 때문에 대도시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16.6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교육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사 확충 요구를 무시하고, 2019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 수를 지난해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줄였다.

문재인 정부와 전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이미 한유총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집단 휴업 등을 협박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 강화 계획 등에 반발한 바 있다. <노컷뉴스>의 폭로에 따르면, 그 뒤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 차원의 사립 유치원 회계시

스템 구축 사업이 슬그머니 중단됐다. 2010년에도 당시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어린이집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다가 어린이집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한유총이 휴업 협박을 할 때 당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현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중재를 했었다.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과연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사립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립 유치원에 지급하는 돈의 명목을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돈은 처벌·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물론 필요한 조치이지만 사립 유치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양질의 유아 교육을 하려면 정부 지원을 확대해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국공립 유치원을 최소 50퍼센트 이상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은 국공립 유치원 교원 수를 2배로 확대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도 들춰지고 있다. 어린이집, 요양, 간병, 장애인 돌봄 시설 등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가 시장화돼 있고 정부는 민간의 이윤을 보전해 주는 방향의 구조 말이다. 이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후퇴시켰다.

이에 맞서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노인 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와 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며 정부청사 앞 식발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보육 1, 2지부는 “어린이집 비리도 심각하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보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시장 논리를 수용해 온 민주당에 기대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양효영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에 밝혀 왔다.

기부금은 이화여대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에 전달됐다. 이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남구현 교수는 2012년 이화여대 재직 시절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

는 혐의를 받았다가, 5년의 재판 끝에 최근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 과정에서 민사소송 승소로 받은 2000만 원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쓰고 싶었다고 한다.

많은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기부에 크게 기뻐했다. 한 청소 노동자는 감격스러워 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따뜻한 온정과 용기를 나눠 줘서 고맙습니다.”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수많은 이주민 행렬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다
- ★ 사우디 언론인 카슈피치 살해 사건이 보여 주는 것
- ★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 ★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변화의 동력
- ★ 우파의 가짜뉴스 선동과 국가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 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냅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직장 | 노조 | 대학교 | 중고등학교 | 기타) _____

(선택) 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강동훈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준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이롭다. 정부가 제대로 정규직화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다. 무엇보다 특혜와 비리의 화신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들이 이런 공세를 펴는 것이 완전히 위선이다.

역측과 악의적 비방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이 온갖 역측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고용 세습'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근거는 전혀 없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사실이라고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1285명 가운데 108명(8.4퍼센트)은 재직자의 친인척"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자 중 일부가 공사에 친인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채용 비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무기계약직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우파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악의적인 비방에 나서서 정규직화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서다

있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사 직원들이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역측도 보태고 있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한 이후인 2012년경부터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당시 공사 내에서는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하는 일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비정규직 채용 정보 등은 공사 직원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친인척에게 그 정보를 소개해 줬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심지어 6년 전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알고 친인척을 비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뒤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친인척이 있는 108명 중 34명은 2016년 '구의역 사고' 전에, 다른 36명은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김군과 같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이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38명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

한편, 〈조선일보〉는 민주노총 소속 전직 위원장(김모)의 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가,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려고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다.

이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이 정규직이 된 것이나, 민주노총 간부의 부인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 빨리 승진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다는 주장 등도 모두 비리와 상관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 채용?

한편,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근거도 없는 '고용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는, 이를 이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총이 채용 시험도 거부하고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한 게 비리 때문인 양 비난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해당 업무를 수년에서 십 년 넘게 일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무슨 자격이 또 필요하단 말인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채용' 운운하며 공개 채용 시험을 치르려 했는데, 이리 되면 비정규직

중 일부가 부당하게 해고될 수도 있었다.

또,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서울교통공사 식당·목욕탕 직원들까지 정규직이 됐다"며, 이게 '채용 잔치'이고 '도덕적 해이'라고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이연주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밥하는 아줌마" 등으로 폄하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식당·목욕탕 노동자들은 왜 정규직이 되면 안 되는가? 오히려 진정한 문제는 식당·청소 노동자 상당수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파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근거도 없는 '고용 세습' 운운하고 보수적인 노동자들을 자극해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파들의 공격이 근거 없는 공세라고 반박했지만,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이미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우파들의 공세를 빌미로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최소화하려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조건이 악화될 상황이 되자 보수적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우파들이 '고용 세습'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하는 만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좌파 활동가들이 기층에서 비정규직 연대에 적극 나서서 것도 중요하다.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 높이려면 꿈수 말고 돈을 써라

이정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꿈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는 심지어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아주 조금 낮아졌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노동자 487만 명 중 비정규직은 225만 명(46.3퍼센트)이다. 그중 간접고용 비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어디 가고 단기 저질 일자리만?

규직이 무려 157만 명에 이른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간 대기업들은 그동안에도 비정규직 증가의 주범이었다. 그런데도 문제

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방지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에도 의지가 전혀 없다. 심지어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이는 직접·간접으로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관련 기사: 본지 262호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인턴 등 단기 비정규직 5만 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부처들은 구체적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연말까지 단기직 약 1만 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742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순이다.

정부는 청년 대상의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를 추구하고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가량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하고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체험형 인턴은 취업 기간이 2개월에서 1년 사이이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무엇보다 일정 기간 고용되더라도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경력 관리나 자기 개발", "직장 체험" 기회를 준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가 과거 정부들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즐겨 사용한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꼴이다.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부족 인력만 즉각 충원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국공립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관건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돈을 쓸 것인지 여부다. 노동운동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 재정을 우선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좌파 세력 견제

김문성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를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를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렇다. 줬다 뺏은 최저임금 개악, 줄 듯하다가 뺏기만 한 노동시간 개악, 있는 일자지만 날아가게 한 제조업 구조 조정, 비정규직 제로를 하겠다고더니 정규직화 제로로 드러난 비정규직 대책 등은 노동자들을 분노케 했다. 해당 사업장들에서 조직화와 투쟁이 등장하는 배경일 것이다.

부유층 눈치 보느라고 부동산 문제에 어정쩡하게 대처하고, 국민연금 개악의 운을 띄운 것도 서민들 화를 돋웠다. 박근혜가 하려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제주 관함식과 주민 탄압도 감점 요인이다.

이런 상황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권을 안정시킬 카드가 문재인에게 별로 없음을 보여 준다. 판문점 선언 비준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지지층 이반을 낳을 것이고 남북 화해 주도 말고는 문재인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킬 카드가 별로 없다

서 강행해 버린 것이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다. 트럼프의 일방적 군축조약 폐기 선언으로 거듭 확인된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미·중 갈등 심화, 문재인이 유럽 순방 중에 각국 지도자들의 동조를 별로 못 얻은 일 등 사정이 썩 좋지 않다. 북·미 간 물밑 협상도 크게 진척이 없어 보인다.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예상 일시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이 상태라면, 일각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이긴다 해도 북·미 간 화해 무드가 이어질지 미지수다.

적폐 청산은 감속 중

남북 문제와 함께 지지를 고공행진의 요인이었던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

한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갈수록 우파 눈치를 더 많이 보기 때문이다.

10월 초 이명박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것 말고는 별 진척이 없다.

사법 농단 수사가 진척이 없으니, 국가가 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일도 진척될 리 없다. 기무사 수

사, 5·18 발포 명령권자 수사, 심지어 세월호 참사 조사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 연루 소식이 슬슬 나온다. 새로운 부패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적폐 구조와 그 수혜 세력에 유착돼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을 (그가 아무리 부패 범죄자라도) 계속 감옥에 가둬 두지도 못하고, 전임 정권 비리·부패 청산 운운하면서도 국가기관의 중·하급 관료까지 다 숙청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적폐 청산에 지배자들의 저항이 거센 건 사실이다. 삼성 측의 무노조 공작에서 노조원이 피해자가 아니라거나, 증거를 제출했더니 증언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들의 뻔뻔함을 보면 기가 막힌다.

그러나 문재인 본인이 재판 중이던 이재용을 우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화체육부 블랙리스트 관련 관료 중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권성동(검사 출신)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청와대 스스로 전교조 인정하기를 기피하고 이석기 전 통일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 등도 노골적으로 기피한다. 삼권분립 운운하며 법원과 국회 탓만 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유시민과 이재명, 친문의 왼쪽 단속하기

친문 핵심 인사들은 좌파와 노동운동이 발목을 잡은 게 노무현 정부 실패의 최대 요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자신과 유시민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과 우파 언론이 노무현을 탄핵까지 하며 못살게 굴었는데도, 노동운동 탓을 더 많이 하는 건 친노 진영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 노조법 개악, 한미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결정, 평택 미군기지 이전, 국민연금 개악, 비정규직법 개악 등 수많은 우파적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진보진영은 필요한 수위의 저항을 제기하지 못했고 그 틈에 우파가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환멸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었다.

여권으로서의 지금의 반우파 정서를 계속 민주당 지지로 묶어 놓으려면 좌파가 이익을 얻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을 두고는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듯하다.

여당 대표 이해찬은 진보·좌파 세력을 달래가며 단속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하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설득한 것도 그였다. 물론 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이다.

친문 친위세력은 진보·좌파 세력을 아예 입 다물게 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노무현 시절에 부동산 원가 공

개, 국민연금 개악, 한미FTA 체결 등으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발해 노무현이 고립된 일을 반면교사 삼아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친문의 내분을 막으려다 되레 앞당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친문 친위세력이 최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유시민을 추대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 복귀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무현재단은 사실상 정치조직이다. 한명숙·문재인·이해찬 등 친노 그룹의 좌장격 인물들이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햇병아리 조선 의원에서 일약 경남도지사로 올라선 김경수가 노무현재단 실무자 출신이고, 이재정 경기교육감, 정현백 전 여성부장관 등이 재단 이사 출신이다.

경찰 수사

유시민은 진보 연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달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복지부 장관할 때 국민연금 개악을 지휘했고,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에 적극 찬성했다.

유시민은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합당을 추진할 때(2011년 말) 이를 반대하는 참여당 당원들을 이렇게 설득했다: 합당은 진보진영이 문재인/민주당 정부 아래서 정권에 대한 좌파적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안에서 개입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 이정희 대

표의 헌법 존중 의지를 이런저런 형식의 만남에서 확인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정책을 내놓고 국회의 법 개정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성남시에서 호평받았던 청년배당을 경기도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의 개혁 약속이 대중의 개혁 염원을 고무하고 기대를 부추기는 것은 우선회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게는 탐탁찮은 일일 것이다.

경찰은 겨우 휴대폰 2대를 압수할 목적으로 이 지사에 대한 대대적 압수 수색을 벌였다. 드루킹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들렸던 김경수는 민주당 전체의 보호막을 얻었는데 반해, 이 지사가 수차례 해명된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는 민주당의 누구도 편들며 나서지 않는다.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방북 수행단에 접경지 단체장인 이 지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이 지사가 최근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너무 심하게 공격했다고 한 건 친문에 대한 경고이기도 타협 신호이기도 하다. 결국 실패하고 우파만 고무하게 될 일치기 개혁 정부와 타협하기보다는, 공언한 개혁을 한사코 실행해 대중을 고무하는 것이 이 지사 자신에게나 노동자·서민에게나 좋은 일일 것이다.)

보수대통합 추진하는 우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구두선에 불과함이 슬슬 드러나면서 지지를 위기를 겪자, 우파가 기운을 되찾고 있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이후 책임 공방과 돈 문제 등으로 사분오열했었다. 그러나 최근 보수대통합 운운하며 내후년 총선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할 것이므로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

정면 대결 기피

민주당은 부패 폭로로 대응한다. 적폐 청산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 폭로도 이 맥락 속에서 벌인 일로 볼 수 있다. 임명 과정에서 상처받은 유은혜 교육부장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개인은 상당한 용기를 발휘했지만 말이다.

유치원 운영자들은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원생들을 안 받겠다고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오보를 불사하며 서울교통공사 등의 정규직 전환 비리 등을 문제 삼는다. 전형적인 피장파장 전법이지

만, 이 공격은 민주당 정부, 민주당 지지체, 공기업, 노조 등을 모두 겨냥한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우파가 곧바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강력한 반우파 정서 때문이다. 특히 노동운동의 동향이 만만찮다. 승리한 박근혜 퇴진 운동에 조직 노동운동이(초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덕분이다.

노동계 안팎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문재인과 일전을 벌이기를 꺼리므로, 투쟁들이 보편화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말이다.

중도파 정부는 구두선으로 표방한 개혁에 실패하면 좌우 양쪽의 공격을 받는다. 그런데 노무현 후 반부와 달리 지금은 우파가 분열해 약화돼 있다. 노동자 투쟁에 유리한 요인이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이 목적임을 분명히 한 문재인과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는 건 잃을 게 더 많다. 자칫 노무현 후반부처럼 좌파적 대안을 건설할 기회를 놓치고 우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유리한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재인 의 신자유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본지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관해 다음 순서로 연재하려 한다.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리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사라질 위험이 크다.”

김세욱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 진보가 국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프레이와 오스본 교수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국내 일자리의 무려 55~57퍼센트가 첨단 기술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기존 기계화·자동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변화를 노동의 세계에 몰고 올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언론들은 이런 두려움을 자극하는 보도를 끊임없이 쏟아 낸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진료하고 간호 로봇이 환자를 돌볼 수 있다든지, 컴퓨터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와 자산관리와 법률 조언을 해 준다든지 등이 그런 사례다. 운전자 없는 자율 주행 자동차, 캐시 없는 무인 계산대, 작가처럼 창의적인 글을 쓰는 내러티브 생성 프로그램도 자주 소개된다.

선정성을 좇는 언론만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2016년에 내놓은 자료(관계부처 합동)에도 이런 전망이 넘쳐난다: “지능형 로봇 - 청소, 요리, 간병 등에 특화된 감성형 가사 로봇 보편화”, “자율 주행 자동차 -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 물류 상용화”, “스마트 공장 - 수요 예측과 맞춤형 생산으로 효율 극대화 및 불량 최소화.”

부풀리기

물론 로봇 도입 같은 디지털 자동화가 노동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다. 산업 로봇 도입에 관한 연구들은 저임금 반숙련 일자리가 조금 줄고, 노동시간과 강도는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한다. 이것은 유토피아적 미

래를 가리키는 호들갑이 참말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과장이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자동차는 당장 일자리를 앗아갈 정도가 못 된다. 현재 운전 소프트웨어는 아직 악천후나, 수신호가 필요한 복잡한 교통 상황에 대처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설사 기술이 그런 수준에 이르더라도 화물차 운전자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특정 지점으로 차를 몰고 가서 화물을 특정 장소에 옮기는 일을 한다. 자율 주행 자동차 자체가 화물차 운전자의 일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지능형 감성 로봇이 청소, 요리, 간병 등을 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다. 컴퓨터 자산 관리 같은 서비스도 그 신뢰도는 아직 매우 낮다. 투자 관리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산이 별로 없는 젊은층 일부로부터 관심을 끌었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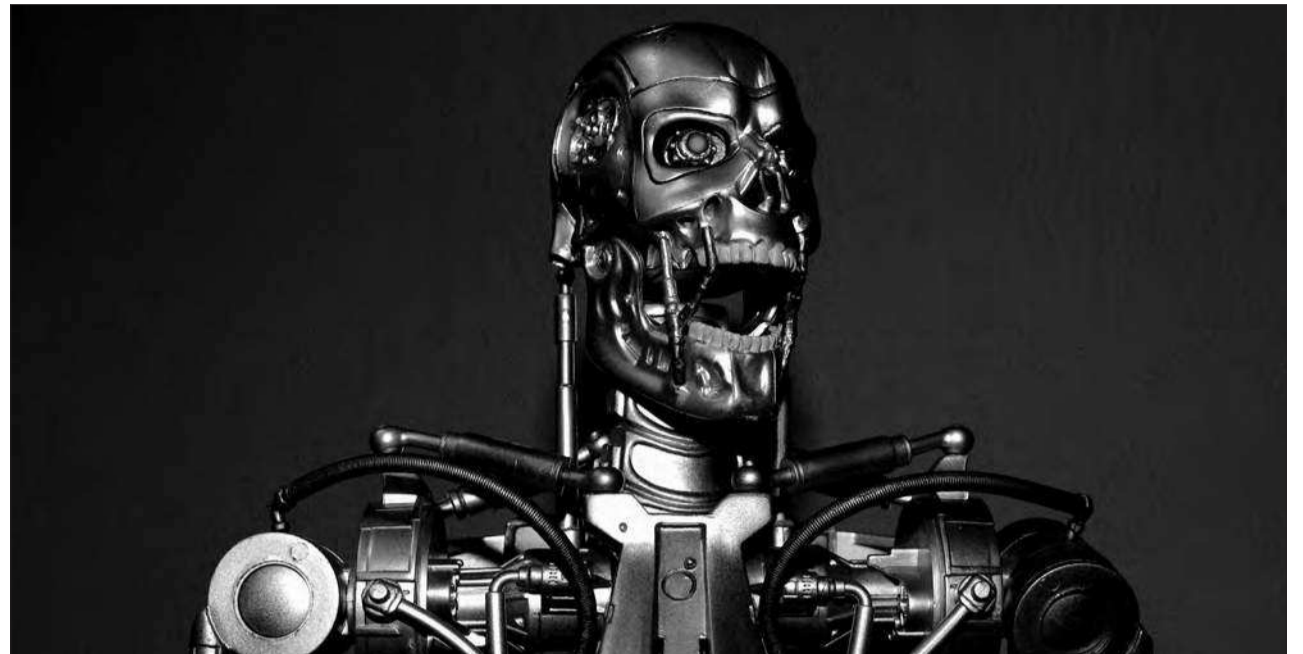
또 다른 예로, 스마트 공장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주장도 과장이다. 독일의 스마트 공장(로봇 자동화)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로봇 사용이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다(2016년). 노동자들은 로봇이 잘 작동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느라 더 강도 높은 노동에 놓여 있었다.

17개국을 대상으로 로봇 도입의 효과를 조사한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제성과연구소의 게오르크 그레츠와 가이 마이클스 교수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14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로봇 사용으로 처음에 미미하게 늘었던 수익이 이후 점점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 그들은 로봇 도입의 효과가 이전의 혁신 기술들보다 오히려 작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 세계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가 널리 알려진 신화보다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인간 로봇?

그렇다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



사람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로 관심을 끈 딥 러닝은 컴퓨터가 진정한 지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다. 세계적으로 로봇 사용이 빠르게 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수년 동안 로봇 자동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016년 현재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531대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감절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데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로봇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인공지능 기술은 실제보다 매우 부풀려져 있다.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두 발로 서서 스스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그런 예다. 완전 자동화된 로봇은 극히 단순한 일을 한다. 바닥 청소가 그런 사례다. 완전한 인간 동작 복제는 한참 멀었다.

로봇 강국 일본에서 발생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를 잘 보여 줬다. 당시 도쿄전력은 냉각 장치가 멈추자 로봇 투입을 결정했지만, 로봇은 단순한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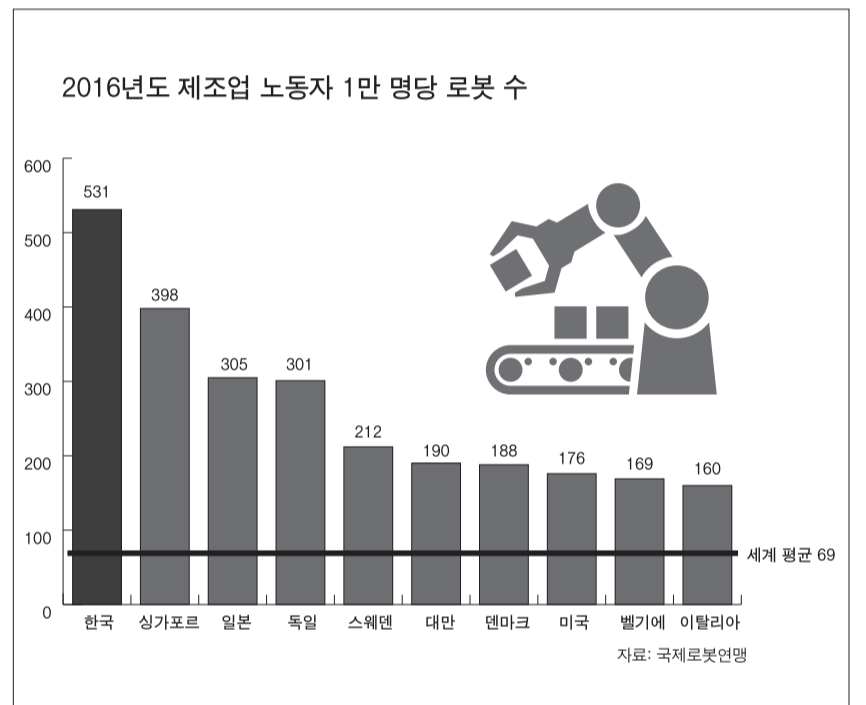
4년 뒤인 2015년, 미국 국방부 방위 고등연구계획국이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발전소 안에 들어가 냉각수가 새고 있는 파이프를 잠그는 것 같은 간단한 임무였지만, 출전 로봇들은 대부분 제한 시간 안에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한국 카이스트팀 로봇(후보)이 우승하면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 대회에 대해 서울대학교 연구자들은 이렇게 정리했다: 2족 보행이 실제로 쓰이는 어렵다. 로봇이 사람 도움(원격 조종) 없이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동작하기도 어렵다. 어떤 로봇도 전신 운동을 보여 주지 못했다.

물론 그 뒤 몇 년 동안 2족 보행이나 전신운동 등이 개선되기는 했다. 하지만 “요리·청소·간호 로봇의 보편화”(정부 합동부처 자료) 같은 전망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인공 지능과 인간 두뇌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그 로봇이 다른 일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로봇은 하나의 업무를 위해 프로그래밍되며, 이렇게 입력된 지식을 다른 업무로 스스로



전환할 능력이 없다. 현존하는 인공지능은 대부분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지능만 갖추고 있다.

기계 학습(머신 러닝) 능력에 대한 환상이 널리 퍼져 있지만, MIT 컴퓨터 과학 및 인공지능연구소 다니엘라 러소 소장은 “로봇 추리력의 범위는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대처 방법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로봇은 여러 상태로 들어가 작동을 멈춘다.”

기계 학습 중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딥 러닝(알파고에 적용)도 결국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사람이 다 설계해 줘야 한다. 최우영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는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 두뇌가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비록 인공지능이 인공적으로 신경회로를 만들어 인간 두뇌를 조금 흉내 낸 것이기는 하지만, 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존 패링턴 옥스퍼드대학교 우스터 칼리지 부교수는, 인공지능에 열광하며 생각하는 컴퓨터의 출현을 예견하는 사람들은 인간 뇌의 진정한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 1000억 개를 담고 있다. 그런데 각각의 신경세포는 평균적으로 1000개의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돼 있어서 그 연결 가닥의 수는 1000조 개에 이르고, 그 모든 연결 가닥에서 전기 자극이 교환된다. 그만큼 수준의 회로를 가진 컴퓨터는 지금

까지도 전혀 없다.

“게다가 뇌는 그저 크기만 한 회로판인 것도 아니다.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구조도 봐야 한다. 그 구조는 DNA의 영향도 받지만, 하나의 개체로서 인간 경험의 영향도 받는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물학적 개체 [인간]들 사이 의사소통의 독특함을 상징한다. 자의식적 사고를 하고 사상과 생각을 서로 나누는 인간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그 독특함의 하나이다.

“이런 의사소통은 단지 전기적 자극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양한 화학적 전달 물질도 필요하다. 이런 연결망 전체인 이 복잡한 물질[뇌]의 기능에 대해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을 흉내 낸 기계를 만들지 못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로봇이 인간 노동을 단순 대체하기는 어렵다. 유연성과 융통성 부족이 그런 사례다. 그래서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는 로봇을 사람들로 일부 교체하고 있다. 로봇 연구자들은 협업 로봇(코봇)이라는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로봇과 사람이 나란히 작동함으로써 유연성과 창의성을 결합시키려는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감정 노동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이정원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집회를 연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엉터리로 전락한 것에 항의하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대표적 노동·일자리 정책으로 내세우며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생각은 정반대다. 이 정책이 발표된 지난해 7월 이래로 노동자들은 기대가 깨지고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심지어 환멸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자들은 상시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무더기로 제외됐다.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은 저임금에 고착되는 임금체계(표준임금모델)를 강요받고 있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자회사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학교, 병원, 공기업·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싸워 온 이유이다. 이런 투쟁 와중에 최근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지회장이 청와대 앞 시위 이후 귀가하다 쓰러져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가하게 “성공” 자평이나 되풀이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그래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노동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것이다.

지금 싸우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수가 새롭게 조직된 신규 노조 조합원이다. 이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앞장서서 끈질기게 싸우며 정부의 위선과 본질을 폭로했고 투쟁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주고 있다.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도 점점 증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 등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문제에서 거듭 후퇴했기 때문이다. 10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안건을 다루기로 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유회도 이런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자회사 방안은 포장만 바꾼 간접고용 꼼수

이번에 파업에 나서는 노조들의 핵심 요구는 자회사 전환 반대, 직접고용 정규직화다. 일부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미 자회사가 설립됐지만, 나머지 상당수에서는 여전히 자회사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옳게 지적하듯, 자회사 전환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없는 방안이다.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이거나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한국잡월드에서 사측이 내놓은 처우 수준도 그렇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피하고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고, 고용 보장과 임금·조건 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좋은 자회사?

게다가 공공기관 자회사는 모회사보다 구조조정하기도 훨씬 쉽다. 공공기관 자회사가 지분 매각(민영화)이나 외주화를 통해 용역업체가 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가스공사, 마사회, 발전사 등에서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됐다가 하루 아침에 용역회사로 바뀐 경험이 있다.

이처럼 자회사 방안은 포장만 바꾼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꼼수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기만적인 자회사 방안을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같은 노동자들의 저항은 일부 노동단체와 인사들이 ‘좋은 자회사’ 모델을 주장하며, 자회사 방안을 수용하려고 노동자들을 설득했던 것이 잘못임을 보여 준다.

이런 단체와 인사들은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른바 현실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 등의 정규직 전환 심의 기구(노·사·전문가 협의 기구)에 참가해 노동자들이 자회사 방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좋은 자회사’ 모델은 커녕 임금 등 처우에서 더 후퇴한 조건을 내밀었다. 최근에는 자회사 설립 관련 법률적 쟁점이 불거져 자회사 전환조차 더 늦춰질 판이다.

노동단체 인사 중에는 철도에서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권고안을 낸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다.

자회사 방안 수용을 주장했던 한 인사는 최근 이렇게 주장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자회사 방식을 용인하면서 하향평준화 경향으로 치우쳐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무책임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우항우에 분노한 노동자들 9월 28일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결의대회

공공부문 산별·연맹 차원으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자회사는 ‘돈 안 드는 정규직화’를 추진하려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인데, 이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공공기관(인천공항, 철도, 한전 등)에서 자회사 방안이 노사 합의로 추진된 것도 정부가 믿는 구석인 듯하다.

이런 상황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만치 않은 투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공공부문 산별·연맹들과 민주노총은 파업에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 특히 공공부문 산별·연맹은 산별노조 차원의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참가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들은 10월 22일 기재부·행안부와 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로 사회적 대화 기구 참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임에도, 노조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 추진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의 대화를 중시하면서 투쟁에 힘을 쏟기는 어렵다. 사실 지난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에서도 민주노총과 일부 산별 연맹 지도자들은 정부와의 교섭에 매달리느라 기층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정부와 파트너십을 이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구상 속에서 정부와 충돌하기를 꺼린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 심화 속에서 훨씬 분명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고 조건을 악화시키기로 방향을 정했다. 직무급제 추진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도 하반기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지금 사회적 대화만 아니라 투쟁 조직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간질 시도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조 내 좌파 활동가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전교조, 철도, 지하철 등에서 노조 지도부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반발을 의식해 정규직 전환을 지지하지 않거나 후퇴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켰을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다. 좌파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파업 투쟁에 나선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꿈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를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익을 내면 연말에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또, 우파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공공부문 정규직 공격에 편승해 “정규직 전환이 세금을 낭비한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노경란 이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사측이 ‘11월 초 있을 자회사 채용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원 160여 명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4월 노조를 만든 뒤 벌써 두 번째 파업이다. “결코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 공공부문 자회사 방어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사회적 논란이 되자, 최근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추진을 잠시 중단하고 노사 양측이 재논의해 보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권고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실사 사측이 고용노동부 권고를 받아들여 재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자회사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만 끌어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 할 수 있다.

청와대 앞 농성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청와대가 책임지라고 주장한다. 박영희 한국잡월드 분회장은 말했다.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수익을 내겠다며 지난 7년간 교육적 사명감으로 버텨 온 우리를 해고하려 한다. 우리는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 박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책임지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마땅히 정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강철구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과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10월 22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이 전환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파업 첫날, 대구의 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이 활력 있게 집회를 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홍종표 공동지부장이 말했다. “사측은 비정규직 1200여 명 중 1100여 명을 멋대로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번 파업은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은 여러 불만을 털어 놓았다. “자회사 고용은 또 다른 간접고용이고 고용은 계속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과거에 자회사 소속이었다. 그러다 2005년경에 사측이 외주화를 추진하면서 하청업체로 바뀌었다. 자회사는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 도움이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7월 20일 이후 입사자, 일부 전산직 등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안도 컸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표했다. “적어도 대통령이 찾아갔던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제대로 정규직화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곳도 본보기 삼을텐데 지

금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9월 28일 첫 파업 이후 이번엔 두 번째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면서 단단해지고 있다. “파업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착취당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 이후에도 준비투쟁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태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26일 파업을 한다.

서울대병원은 승강기, 전화설비 등 시설 유지 업무와 의료정보시스템·영상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노동자들을 ‘고도의 전문성’ 업무라며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그런데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병원에서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을 파견·용역직으로 고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서울대병원은 직원식당, 장례식장

식당, 린넨 업무(세탁물 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민간위탁이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범하게 인정한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측은 청소노동자들도 자회사나 별도직군을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화하는 꼼수를 쓰려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 측은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거론하며 압력을 넣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에게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해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방안이다.

그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만큼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계속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병원 분회(정규직 노조)는 10월 1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일정을 11월 9일로 앞당기기로 결의했다. 병원장 서창석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뽑아놓은 인력조차 투입하지 않고 대기상태로 묶어두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도 매우 크다.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장호중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기승전 ‘돈 안 들이기’로 생색내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최근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 시절 박원순 시장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후퇴가 서울시의 계획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기관 중 극히 일부만 직접 운영하고 대다수는 여전히 민간 위탁으로 남겨 두려 한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돌봄바우처서비스 등 4개소만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제가센터로 만들 계획이다. 직고용 인력 규모도 480명밖에 안 된다.

서울시는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

획이라지만 목표치가 2022년까지 25개소에 총 3664명을 고용하겠다는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만 14만 명이 넘는데 말이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포괄하는 분야도 매우 협소하다. 민간 위탁의 폐해가 만연하다고 꼽히는 보육과 사회복지시설 분야조차 제외됐다. 요양시설도 사회서비스원 소속이 될지 미지수다.

이처럼 민간 위탁으로 남겨진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도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될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노동자들은 서

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 148원)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금 보다는 오를 수 있지만, 적잖은 수가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일 공산이 커 생활고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파트타임

계획안은 또, 사회서비스원 소속 센터 노동자 임금체계를 숙련급으로 제시했다. 매년 호봉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숙련에 따라 직급을 올려 주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공공기관 직무급제와 연계하려 하는데, 그와 연계된 임금 인상 억제 방안일 듯하다.

노동자들은 이번 계획안에 “탐제,

2인제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도 수용이 안 됐다고 지적한다. 팀제, 2인제로 근무하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요컨대,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말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꼭 마찬가지로 기승전 ‘돈 안 들이기’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보육 부문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민간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타협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에게 울분을 토했다. “사회서비스원 공약 때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을 찍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사기였는가?”(정숙희 도봉실버센터 노조 분회장)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들의 처우 개선은 평범한 노동계급 가족의 삶의 질과 연관돼 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재가요양지부, 보육1,2지부, 사회복지지부)은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간에 내맡긴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폐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재정을 대폭 투입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김은영

왜 난민을 방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은 10월 13일 '2018 한국사회포럼'의 한 워크숍인 '한국 난민의 현실, 그리고 난민 혐오에 맞서기(노동자연대 주관)에서 노동자연대 이정원 운영위원이 발제한 내용이다.

난민 현황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전쟁, 폭력 그리고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의 수가 5년 연속 증가해 2017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부터 매년 급격히 늘어 2017년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수는 6850만 명이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1620만 명이 늘었다.

이 중 국경을 넘어 자국을 떠난 난민은 2540만 명이었다. 이는 "2016년보다 290만 명 증가한 수치이며 유엔난민기구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연간 증가"다.

강제 이주민 중 3분의 2는 국내 실항민이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집을 떠난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국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 난민 중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나라는 시리아다. 그 뒤를 폴란드,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이 잇고 있다.

전쟁, 탄압, 가난 등이 이렇게 많은 난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침략하거나 군사적·경제적으로 개입한 나라

들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그러나 서방 국가들은 모두 난민을 향해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있다. 유럽은 일찌감치 '요새화된 유럽'이라 불릴 정도로 이주민·난민 유입을 통제해 왔는데, 특히 2015년 시리아 전쟁이 격화돼 난민이 대거 발생하자 이런 통제를 더 강화했다. 가령, 유럽연합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국경 장벽을 세웠다. 또, 지중해 등지에서 해군력을 동원해 난민 단속을 강화하고, 북아프리카에 난민 수용소 설립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난민의 85퍼센트는 개발도상국에 체류하고 있다.(난민 다섯 명 중 네 명은 자국과 근접한 국가에 체류한다.) 터키에만 350만 명, 파키스탄·우간다·레바논·이란에 100만~140만 명씩 난민이 있다. 방글라데시·수단·이디오피아·요르단에도 70만~93만 명씩 난민이 있다. 난민 최대 수용국 10개국 중 선진국은 독일이 유일하다. 그러나 터키 내에 시리아 난민들을 묶어두는 조처를 이끈 것은 독일 총리 메르켈이었다.

한국은?

전 세계 난민의 극히 일부가 한국으로 온다. 정부나 언론은 난민 신청 증가율을 부각해 '한국으로 난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 하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자 거짓말이다.

전 세계 (본국을 떠난) 난민의 0.17퍼센트가 한국에 왔을 뿐이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까지 고작 4만 2009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그리고 849명이 난민 지위를 얻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1550명을 더해 "난민 인정(보호)"을 받은 수가 2399명이라고 부풀린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을 거부한 사람들 중 명백히 강

제송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체류만 허용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시리아 난민 대다수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조차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해야 해 결코 '인도적'이지 않다.)

난민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국적 순으로 난민 인정률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1.91퍼센트, 중국 0.41퍼센트, 이집트 0.63퍼센트, 나이지리아 0.3퍼센트다. 7위인 시리아 난민의 경우, 2017년 기준 1153명의 심사가 종료됐는데 단 4명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인정률은 0.34퍼센트다(2018 난민인권센터 통계자료집).

난민 인정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들 대다수가 '가짜' 난민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난민 제도가 체계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작동하기 때문이다.

난민의 입국 여적(출입항만 사전 심사, 난민 다수 발생 국가 무사증 제도 폐지), 난민에 불리한 난민 심사 과정(부정확한 통역, 난민에게 박해의 입증 책임 지우기, '가짜' 난민 슈아내기식 불공정한 심사, 없는 것과 다른 없는 생계 지원 등), 까다로운 체류 심사 등 전 과정이 이런 효과를 낸다.

난민 인정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한국의 난민 제도가 체계적으로 난민 인정률을 낮추는 효과를 내도록 작동하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16일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누가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난민 반대"를 외치는 우익들은 마치 한국이 난민들의 천국이라도 되는 양, 상당수 이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난민으로 위장해 몰려 들어 한국 사회를 위기에 빠트리려고 있는 양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이주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도 난민은 극히 소수다. 전체 난민 신청자는 한국 이주민의 1.8퍼센트에 불과하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이주민의 0.037퍼센트다(2018년 6월 현재, 전체 이주민 229만여 명).

난민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세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퍼뜨리며 혐오를 조장하고 나섰는데, 이들이 퍼뜨린 뉴스들은 미국의 극우 웹사이트나 유럽에서 떠도는 가짜 뉴스들이 출처였다. 최근 <한겨레> 신문은 유튜브 채널 100여 개, 카카오톡 채팅방 50여 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극우 기독교 세력이 혐오 확산의 핵심임을 폭로했다. '에스터기독교운동'이라는 종교 단체가 진원지임을 밝혀 냈는데, 이들은 박근혜 탄핵 반대에도 적극 나선 세력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극우파 세력이 가장

취약한 소수자인 난민 문제를 이용해 우파 세력의 복원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험한 징조다. 단지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시위와 행진을 벌이고 있고, 극우 기독교 기반뿐 아니라 우파 정치인들이 결합해 이 운동을 고무하고 지원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이 정치인들은 집회에서 연설하고 난민법 개악 또는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난민 문제를 주류 정치권으로 가져와 논란을 더 키우고 쟁점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우파들을 결집시키고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이다.

난민 혐오를 퍼뜨리는 자들은 '무슬림 난민'을 문제 삼는다. 무슬림들이 여성 차별적이고 성폭력이나 테러를 저지를 거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다른 많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슬림도 단일하지 않고 이질적이다. 이슬람과 아이시스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무슬림들이 대부분 이들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편견은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퍼뜨린 거짓말에 불과하다.

사실 서구에서 이슬람 혐오는 이슬람이 위협적이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의 핵심 코드로 강화돼 온 것이다. 길게는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나 미국이 후원하던 타락한 이란 왕정을 타도했을 때 미국은 이슬람을 악마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냉전 해체로 사라진 "외부의 적"을 이슬람으로 대체했고, 2000년대 미국 등 서방의 제국주의 전쟁 속에서 더 강화돼 왔다.

또 서방 정부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긴축을 추진해 복지를 삭감하고 노동계급과 빈곤층의 삶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소수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시도로서 '내부의 적'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것이다.

서구만큼 뿌리가 깊지는 않지만, 한국 정부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제국주의 전쟁을 지원하거나 이주노동자를 공격할 때 주로 이슬람에 대한 비난과 공포를 부추겼다. 이는 우파 정부 하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다. 이런 공격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 박근혜는 테러방지법까지 제정했다.

난민 혐오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자

난민 혐오에 편승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이들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올해 예멘 난민들의 입국을 계기로 논란이 크게 벌어지기 전부터 '난민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한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며, "가짜 난민들이 제도를 악용한다"며 난민 심사 절차를 바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미 정부는 2016년 난민 재신청자에게는 체류와 취업 제한도 강화했다.

그리고 올해 난민 반대 주장이 거세지자,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악용자를 걸러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것의 진정한 목적은 난민 증가(인정)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난민법 개악안을 비롯한 8건의 개악안과 법무부의 조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내용 중에는 난민 심사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난민 심사 기간과 행정소송 기간을 단축하며, '거짓' 서류 제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난민 신청자들의 처지(신원 증명이나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움, 언어 문제와 열악한 경제적 처지와 거주 불안정 등의 조건)를 고려하면 난민들에게 매우 가혹하거나 불리한 조처다.

특히 '경제적 이유'를 난민 불인정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난민 불인정을 정당화하는 매우 위험한 규정이다.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원인 중 경제적 빈곤 문제를 떼어서 볼 수도 없는데 말이다.

심지어 난민 신청자·인도적 체류자들에 대한 강제 송환 금지 규정을 없애라는 끔찍한 내용도 있다. 난민 협약은 강제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분노를 이주민에게 돌리지 말라

이런 개악 내용들 중에는 이미 유럽 등에서 난민 억제를 위해 도입된 조처들이 적지 않다. '박해 가능성이 없는 국가에서 왔거나 경제적 이유로 신청한 경우 난민 불인정한다'는 규정은 서방 정부들이 난민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의적 수단인 경우가 흔했다.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노동 이주를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을 대폭 축소했고 체류 자격을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미 정주한 이민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 특히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해 인정률을 크게 떨어뜨리고 많은 난민을 구급 시설에 가졌다. 이런 방식으로도 난민 유입을 막지 못하자 비자를 신선행에 입국을 차단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난민 반대 세력의 주장과 일부 사람들의 정서를 이유로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난민들을 한층 큰 고통으로 내몰 것이 뻔하다. 또 이는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보수우익 세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

서 이런 과정이 거듭 반복되며 상황이 더 악화돼 왔다. 지금 한국 정부의 대응도 이런 위험한 길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우파들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정부 자신의 필요 때문이기도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금 정부는 한국 경제 위기가 장기화하고 심화하기 시작하자 미등록 이주민이 일자리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한국의 고용을 악화가 이주민 탓이라는 주장을 퍼뜨려 진정한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한 분노를 이주민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 속죄양 삼기 정책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특히 인종차별적 공격이 강화되는 것은 각국 정부들이 이런 위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표적으로 눈을 돌리면, 대중의 삶은 개선은커녕 더 악화되기 십상이다. 노동계급이 분열돼 정부나 사용자에 맞설 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론

따라서 우리는 우파들의 난민 혐오와 인종차별 부추기기에 맞서 난민을 환영하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이에 편승해 난민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도 맞서야 한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도 강화하는 상황(단속 강화, 최저임금 삭감 등)이므로 이주노동자 방어 운동과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운동은 최대한 광범한 대중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난민과 이주민 공격, 이슬람 혐오 등과 같은 인종차별은 경제 위기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라지기는커녕 유지·갱신돼 왔고, 최근에는 더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인종차별이 자본

주의 체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은 단지 과거의 쓰레기 같은 편견이 남아 있거나, 갑자기 대중들이 후진적·반동적 사상에 빠져들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련의 인종차별적 정책과 제도들이 강화돼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자본주의에서 이주민들은 경제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되고, 동시에 정부나 체제에 대한 불만의 엉뚱한 표적이 되곤 하는 것이다.

또 오늘날 난민이 발생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 러시아, EU 등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군사적 개입으로 파괴되고 그 결과로 내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들이다. 이 역시 자본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이 더 나은 삶과 안전을 위해 이주하는 것을 문제 삼아선 안 되고, 이 체제와 지배자들의 정신 나간 우선순위를 비난해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이주 규제를 필요로 하고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이것은 아무리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인종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난민과 이주민을 방어하는 대중 운동이 중요한 이유다. 인종차별 강화가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므로 이 운동에 노동계급이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아가 이런 끔찍한 차별을 유지·강화하는 자본주의에도 함께 반대해야 한다.



사진 출처: Malaysia Chenov



독일로 향하는 기차 탑승을 거부당한 시리아 난민들. 2015년 9월 헝가리 (위)

미국 등 서방 국가는 제국주의 전쟁을 정당화하려 이슬람 혐오를 체계적으로 부추겼다 (아래)

국민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내국인이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역차별이라도 당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난민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정부의 난민 생계비 예산(난민 신청 후 취업이 금지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비)은 난민 증가를 반영해 증액되지 않아 생계 지원 예산은 전체 신청자의 3.2퍼센트밖에 커버하지 못할 수준이다. 게다가 2017년 생계 지원비로 쓰인 비용(8억 2000여만 원)은 한국 거주 이주민들이 출입국에 낸 수수료 140억 원의 6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정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도입해 이주민 복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주민이 낸 수수료로 충당하기로 했고 이를 근거로 출입국 사무소 수수료를 인상했다.

또, 난민 신청자들은 의료보험과 같은 최소한의 사회복지도 제공받지 못한다. 불안정한 체류 조건 때문에 상당수가 매우 열악하거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처지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난민 등 이주민이 문제를 낳는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논리다. 흔히 정부와 언론은 이주민이

늘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범죄가 늘고 일자리가 줄고, 내국인의 복지를 빼앗아 간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이주민이나 난민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 난민이 지금보다 대거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할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인 나라다.

결국 국내의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진정한 문제다.

또 난민 대부분은 머물거나 정착한 국가에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독일 정부가 난민을 100만 명가량 받아들인 데는, 부분적으로 이들을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 난민들은 정착한 국가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노동자로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을 비난하는 주장은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평범한 사람들을 잘못된 대안으로 이끌려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김정은 이미지 변화를 계기로

북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본다

김영익

남·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중도·진보계 친정부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미지를 새로 색칠해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파 언론에서는 그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트러블 메이커', '핵무장 폭군'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들은 공식 이데올로기의 변화에 심기가 불편하다. "모두가 '집단 망각증'이라도 걸린 것 같다." 우파는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독재자이고, 김정은 치하의 북한은 주민을 강압으로 통치하고 수탈하는 봉건 왕조이자 전체주의 체제라고 비난한다.

우파의 북한 비판은 위선적이다. 똑같은 비판을 남한으로 돌려도 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우파 언론과 삼성·현대·LG 같은 재벌 중에 세습 기업이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렵다. 또한 우파들은 평양의 마천루와 평양 바깥의 공평을 대조하지만, 이런 불평등은 남한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도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이다.

어쨌든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자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일부 바뀌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180도 달라진) 김정은 칭찬도 한몫했다. "솔직담백하고 예의 바르더라", "노련하고 능수능란하다", "남에 대한 배려도 보이는 지도자."

결론부터 말하면, 김정은은 북한 인민을 억압하고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다. 그리고 이 점에서 남·북한 지배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둘은 "싸우는 형제"일 뿐이다.

체제의 동역학

진보·좌파 진영의 일각에는 국유화된 경제 체제나 이데올로기(또는 헌법)에 주목하며 왜곡됐어도 북한을 사



수령론 같은 북한의 일부 부차적 특징이 아니라, 체제의 동역학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회주의 사회로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국유화된 경제 체제를 곧 사회주의로 보는 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개념과는 아무 관계 없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 권력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파리 코뮌을 크게 찬양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 국가 건설 과정에서 노동계급은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산업을 국가가 소유·통제하지만, 그 국가를 통제하는 건 북한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유리된 국가 관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언제나 사회 체제의 유기적 일부이자 능동적 요소였다. 그래서 말년에 엥겔스는 국가의 경제 통제나 국가 생산을 사회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산업을 통제한 북한 관료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에 열을 올려 왔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압력에 대처하는 북한 관료의 대응 방식이었다.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한 군사적·경제적 경쟁 때문에, 북한 관료는 제한된 자원을 중공업에 집중 투자해 자본 축적을 이뤄 왔다.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착취는 압력에 비례해서 증대했다.

이런 경쟁의 논리는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축적을 위한 축적, 경쟁

을 위한 경쟁'이다. 즉, 북한 노동자들은 경쟁적 축적 시스템에 종속됐다.

북한 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적시해 놓았다(8조). 하지만 북한 노동계급은 권력을 갖기는커녕 민주적 권리와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들은 생산수단, 생산물, 생산방식 모두에서 소외돼 있다.

북한 노동계급의 다수는 여전히 굶주림과 궁핍을 겪는다. 10월 9일 세계 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 1000만 명 이상(북한 인구의 약 40퍼센트)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북한 관료는 핵무기개발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수단을 계속 축적한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 언급한 대로 북한은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이 공존하는 사회'이다.

북한은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더도 덜도 없이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사회다.

시장화?

최근 학계는 터무니없이 북한의 '시장화'에 주목한다. 시장화가 진전되면 북한이 시장 자본주의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김정은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돼,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그들은 시장화가 북한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고 북한을 국제 질서(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 안착시킬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다.

학계의 북한 '시장화' 주장은 현실보다 크게 과장돼 있어 보인다. 1990년대 이래 북한 경제는 장기간 위기를 겪었다. 그 와중에 많은 주민들이 살아 남으려고 장마당 거래에 뛰어들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확보한 사람들도 돈주까지 등장한 것은 사실이다. 돈주들의 일부는 서비스 업체를 경영하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시장 자본주의로 변모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다. 생산 부문을 포함한 북한 경제 전체로 보면,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여전히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북한에서 국가기구의 주도로 제한적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20여 곳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섰다.

개별 국영 기업들한테 기업 활동 자율성을 꽤 부여하는 조처도 내렸다. 이렇게 내부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과거 유고슬라비아 같은 일부 동구권 국가

도 시도했던 일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조심스런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진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더구나 지금의 대외 환경이 북한에 불리하다.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 재건에 필요한 투자를 외부에서 끌어오기가 어렵다. 경제 특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세계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각국의 보호무역 추세가 강해된다는 점도 경제의 빚장을 풀고자 타진하는 북한에게 불리한 요인이다.

북한 관료로서는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의 이행(실사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선택 선택하기 어렵다. 각 국영 부문을 통제하는 관료들(지배계급이다)의 이해관계 충돌로 내분은 휩쓸릴 수 있고, 그 와중에 아래로부터 저항이 벌어질 틈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직후 마오쩌둥 측근(4인방)이 숙청되는 등 관료들의 격렬한 내분을 치르고 나서야 전면적인 개혁·개방 노선을 시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내분의 재연을 배경으로 1989년 톈안먼 항쟁까지 일어났다.

실사 시장 개혁·개방이 진전되더라도, 시장화는 북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북한 노동계급의 처지에서 보면, 북한 경제의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옆으로 계걸음 치는 일일 뿐이다. 과거 국가 통제 경제에서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남한의 경험에 비춰 봐도,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었다.

북한 노동계급이 스스로 일어서서 계급 착취·억압 구조를 무너뜨릴 때, 노동자들과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북한 한 나라에 국한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국제적인 혁명적 변혁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장기화된 북한 체제의 모순과 위기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아직도 역사를 이해 못 하는 자본주의 예찬자 후쿠야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정체성》이라는 별로 흥미를 끌지 못할 제목의 새 책을 출판했다. (내용을 보기 전에는) 책이 무엇을 다룰지 알기 힘들다.) 이는 1992년과는 상당히 다른 일이다. 그때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후쿠야마는 그 전부터도 유명했다. 1989년 그는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부에서 정책기획국 부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역사는 끝나는가?" 하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냉전

시절에 소련에 맞서 미국이 승리한 것은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최종 승리를 뜻하고, 따라서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는 위대한 독일 철학자 헤겔을 따라서 역사를 경쟁 이데올로기들의 투쟁으로 이해했다. 그의 주장인 즉,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항할 능력이 있는 최후의 진보적 사상 체계를 상징했으니 그것이 실패하면서 역사는 끝났다는 것이었다.

[후쿠야마가 그 논문을 발표한] 1989년 말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공산당 정권들이 몰락했고, 곧이어 소련 자체도 붕괴할 것이었다. 후쿠야마는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공들여 설파한 자본주의 승리론의 대변인으로 여겨졌다.

그런 평가는 아주 공정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유명한 구절에서 후쿠야마는 다음과 같이 자기 생각을 밝혔다. "역사의 종말은 매우 슬픈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시대는 경제적 계산의 지배를 받는 시대이고, 기술 문제, 환경에 대한 우려, 닳고 닳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한없이 생겨나는 시대일 것이다." 그

러나 그는 그 논문의 주장을 더 정교하게 설명한 책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서 마르크스를 죽은 개 취급했다.

1992년에 나와 후쿠야마는 맨체스터 직공학교에서 그의 책을 두고 논쟁을 했다. 토론회에 약 200명이 참석했는데 누구도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못해 이렇게 말했다. "맨체스터에서는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군요."

그 뒤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역사는 굳건히 살아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리고 후쿠야마는 마르크스에

▶ 11면으로 이어짐

▶ 10면에서 이어짐

관해 어조를 바꿨다. 1989년 그는 이렇게 썼었다. “분명히, 계급 문제는 서방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해결됐다. ... 현대 미국의 평등주의는 마르크스가 상상했던 계급 없는 사회의 필수 요소를 성취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른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을 설명하려 애쓰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사회 계급은 ... 선진국과 신흥국들에 존재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회적 균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듯하다. 이는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가 직접 낳

은 결과이고,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는 1945년 이래 미국이 창조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촉진한 것이다.”

후쿠야마는 자신의 최근작을 홍보하려고 <뉴스테이츠먼>과 인터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현재 국면에서 카를 마르크스의 어떤 말들은 내 보기로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마르크스는 ... 노동자들이 가난해지고 수요가 불충분해지는 과잉생산 위기를 말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여전히 1989년 논문에서 개진한 인식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역사가 헤겔이 “인식을 위

한 투쟁”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추동된다고 주장한다. 이 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뿐 아니라, 현재에는 정체성 정치로도 표현된다는 것이다.

헤겔

후쿠야마가 헤겔을 이리저리하게 오해하는 면도 있지만, 사상을 결정적 요인으로 여기는 것은 둘의 공통된 오류이다. 마르크스는 오래 전에 그런 관점의 약점을 지적했다. 사회는 경제적 관계들의 구조와 생산 기술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를 보지 못한다는

약점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이데올로기 투쟁의 영역은 인간이 “갈등을 인식하게 되고 싸우는” 곳이다.

후쿠야마는 정치를 이데올로기 변화와 권력 쟁투로서 피상적으로 이해한다. 1989년에 그는 마르크스를 무시해도 된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거짓되게도)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통치 정당성을 찾은 정권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뒤로 30년은 자본주의를 계급 착취와 주기적 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체제로 본 마르크스의 비판이 중요하다는 것이 거듭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교육의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후쿠야마는 실패한 과학자처럼 뒤에 처져서는, 근본으로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이론적 틀에 마르크스를 양념처럼 가미할 뿐이다.

그는 [새 책에서] 정체성 정치에 주목한다. 한때 자신이 찬양하던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경제적 고통 탓에 일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민자를 비난하도록 고무되는 현상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말이다.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7호 / 번역 차승일



문재인 정부, 연금 개악 계획

장호중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특위가 문재인 정부의 연금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국민연금 특위에 구속력이 없는데다 정부도 그 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논의를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논의의 시한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다. 또 "복수의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복수안을 조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특위의 결정이 무엇이든, 국회 논의가 그 결정에 제약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일각의 기대와 달리 국민연금 특위는 '의견 청취' 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문재인이 '사회적 합의'라는 약속조차 내팽개칠 태세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바람과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두 달 전 '더 내고 지금대로 받는 안'과 '이 안보다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 중에 고르라는 황당한 '복수안'을 냈다. 전자를 선택하라는 건데, 즉 연금을 지금 수준대로라도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협박이다.

둘째, 문재인은 여기에 더해 '다층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을 확대하라는 얘기다. 국민연금 특위의 이름에도 '국민연금' 외에 '노후소득 보장'을 병기한 이유다.

이는 1990~2000년대 세계은행, OECD 등이 각국에 권고한 신자유주의적



2010년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선 프랑스 노동자들 사르코지를 무너뜨릴 잠재력을 보여 준 이 투쟁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린 노조 지도자들의 불필요한 후퇴로 결국 패배했다

연금 삭감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과 일치한다. 연금 삭감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겨 기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노후 생계를 민간연금에 의존하도록 해 기업주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노동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도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지만 문재인은 한국 자본주의의 중장기 전망을 두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여긴다. 615조 원에 이르는 연기금은 그런 설득에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연기금이 주요 대기업의 주가를 떠받치는 구실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세계은행도 주요 선진국에 연기금을 늘리도록 권

해 왔다.

신자유주의

민간연금 확대는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도 "양자의 병행 발전의 추구는, 훗날 대처 정부가 공적연금의 축소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김영순, 《코끼리 쉽게 옮기기 - 영국 연금 개혁의 정치》)

2010년 이후에는 특수지역연금(공무원연금) 개악과 연금 지급 시기 연장 방안 등이 세계은행과 OECD의 새로운 권고사항으로 추가됐다. 전자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추진했다. 후자는 지금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한창 추

진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뭔가 개혁을 제 공하는 것처럼 말한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공적 연금제도가 본격 도입되던 때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함께 추진됐다. 그러다 보니 연금 제도 도입으로 생긴 노후 소득 개선 효과와 신자유주의적 개악이 어지럽게 뒤섞여 현 정부의 정책이 개선인지 개악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많다.

예컨대 문재인은 소득대체율(자기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을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인상이 아니라 삭감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에 연금을

무려 3분의 1이나 삭감했는데, 반발 때문에 한번에 삭감하지 않고 20년에 걸쳐 조금씩 삭감하도록 했다. 문재인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삭감을 멈추겠다는 안을 (복수안 중 하나로) 내놓은 것뿐이다. IMF 이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말이다.

이를 두고 개혁이라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이 워낙 심각해 OECD도 2016년에 한국 정부에 연금액이 더 낮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요컨대 문재인이 내놓은 계획은 신자유주의적 연금 삭감 정책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들과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한 정책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친기업 일변도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악 시도도 그런 불만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 등을 위해 경사노위 참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일뿐 아니라 신기루를 쫓느라 투쟁 조직에 쏟아야 할 힘을 낭비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재인은 국민연금을 개혁할 뜻도, 국민연금 특위의 결정에 따를 생각도 없다. 그러기는커녕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민간연금을 활성화하

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사회적 대화'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연금 개악을 시도할 때마다 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예컨대 프랑스 정부는 1995년 쥐페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가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좌절되자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방법을 강구했다. 개악안에 쥐꼬리만한 개혁안 포함,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기 등이 그런 방안이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마비시켜서 2010년에는 기어이 개악을 관철시켰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민주노총은 10월 30일 국회 앞 집회 등을 시작으로 정부에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요구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국민연금 6대 개혁안'에

는 '국가 및 사용자 부담 강화', '기초연금 내실화' 등 꼭 필요한 개혁 요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합의를 염두에 둔 것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온건해진 요구들도 있다. 먼저 문재인이 보험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데도 이를 명확히 반대하지 않는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국민연금지부는 아예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큰 문제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은 당장 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비난을 받게 될 텐데 말이다.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로 인상하라는 요구를 나중으로 미룬 것도 지나치게 수세적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보험료 인상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즉각 50퍼센

트(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이 이미 하겠다고 한 '국가 지급보증 명문화'를 가장 중요한 요구로 올려둔 것도 부적절해 보인다. 일부 활동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우파가 이를 악용할까봐 명문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급보증 명문화가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한다. 법이야 나중에 다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대로 하지 않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노인들의 빈곤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다. 집권 중에도 노인들의 처지에 냉담한 정부가 수십년 뒤의 노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따라서

현재 노인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빈곤을 개선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소득상한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지금처럼 한 달에 434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한 일이다. 이는 기업주와 부자들의 부담만 줄여 주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소득상한액을 650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는 너무 온건하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고 말 가능성이 크다. 아예 상한액 제한을 없애거나 적어도 건강보험 수준(7810만 원)으로 상한선을 올려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노동자·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